

낙태죄 ABORTION

관계법령

형법 심각함gg 제269조) (낙태)

-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1995.12.29]
-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. [개정 1995.12.29]
-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[개정 1995.12.29]

(제270조) (의사 등의 낙태, 부동의낙태)

- ① 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.>
-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.>
-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

모자보건법 제14조(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)

-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.
 - 1.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(優生學的)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
 - 2.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
 - 3. 강간 또는 준강간(準強姦)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
 - 4.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
 - 5.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,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 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09.1.7.]

제28조(「형법」의 적용 배제)

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「형법」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.[전문개정 2009.1.7.]

의료법 제8조(결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07.10.17.>

- 1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2.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3. 금치산자한정치산자
- 4. 이 법 또는 「형법」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지역보건법」, 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,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」, 「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」, 「혈액관리법」,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약사법」, 「모자보건법」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
헌법재판소 결정 및 낙태죄의 위헌성

헌법재판소 결정

- 2012.8.23.자2010헌바402 결정: 결론은 합헌(정족수 부족)
-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
 - 태아의 독자적 생존 여부를 낙태죄 허용의 기준으로 삼을수 없음
 - 임부의 자기결정권(사익)이 태아의 생명권(공익)보다 중하다고 볼 수없음.
-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
 - 인간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적일을 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 침해
 - 형법상 낙태죄 규정이 사문화된 현실도 고려
 - 임신 12주를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

낙태죄의 현실

- 2005년 9월 보건복지부 발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
 - 한해 낙태시술 추정 건수 약 34만 2천여건 : 통계 주관기관마다 차이(최대 200만건까지 추정)
 - 그중 14만 3천 여건이 미혼 여성의 낙태(약 42%)
 - 나머지 기혼 여성 낙태도 단산 혹은 터울 조절이 이유(약 75%)
- 낙태시술 추정 건수 중 4.4%정도만 관련 법령상 합법 조건 충족
- 불법 낙태의 약 90%는 사회 경제적 사유
- 낙태시술 처정 건수 중 96.3%가 임신 12주 미만에
- 낙태죄를 처벌해도 낙태를 감행할 것이라는 의견 84.6%

낙태 실행 판결시대,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고, 만약 소송에 걸리면 무조건 선고유예를 받아야 한다. 집행유예는 의사면회취소 사유가 됨